

강진 여고생 죽음 풀 증거 끝내 못찾나

경찰, 아빠 친구 살해범 지목
이양 시신서 수면유도제 검출
경찰청장 내정자 독촉에
뒤늦게 부랴부랴 수사 확대
부실한 초동수사 도마에



김재순(오른쪽)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6일 강진경찰서에서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 중간 수사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 8부 능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진 여고생 이모(16)양의 살해범으로 아빠 친구인 김모(51)씨를 지목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장 중요한 이양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숨졌는지 등 사인(死因)과 범행 동기, 행적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또 초동수사 실패 등으로 실종 9일만에 시신을 발견, 부패가 심한 탓에 성범죄 여부 등 이양의 역올한 죽음을 풀어 줄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

뒤늦게 전남경찰청이 전국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수사·수색을 대폭 확대한 것도,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한 독촉 전화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경찰의 소극적 수사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강진경찰은 “지난 6일 중간수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양 시신의 정밀 부검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용의자 김씨를 이양 살인 피의자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이양의 체내에서 수면유도제 0.093mg이 검출됐으며, 김씨가 이양 실종(지난달 16일) 이틀 전인 지난달 14일 강진읍의 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수면유도제와 동일한 성분이었다.

또 김씨가 집에서 태운 물전에서 나온 금속 링과 바지단추, 천조각 등은 이양이 실종 당일 착용한 바지와 손가방에 달린 것과 동일한 종류로 확인됐다.

김씨의 집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전기가 발기에서도 이양의 DNA가 나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14일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뒤 이양의 DNA가 검출된 낫과 전기가발기를 배낭에 담아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신부패가 심해 국과수에서 사망 원인, 성폭행 흔적 등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새벽 12시57분께 이양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 받은 직후 이양 휴대전화 신호가 매봉산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용의자 김씨의 집과 식당을 중심으로만 수색하는

데 그쳤다. “김씨가 이양을 데리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자택 근처 공사장에서 목을 때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건은 담보상태에 머물렀고, 실종 5일째인 지난달 20일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실종 여고생을 찾기 위한 수사·수색 인력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 앞서 민갑룡 내정자는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빠른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대규모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강진에는 전국에서 실종전문 경찰인력이 대거 투입돼 4일만에 체취권이 이양의 시신을 찾아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민 내정자와 강 청장간 직통전화가 사건 발생 3일만인 지난달 18일 언론의 첫 보도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남청이 적극적으로 사건조기부터 경찰청의 대규모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가 전남청장에게 빠른 사건 해결을 독려하고 경찰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얘기한 것”이라며 “결국 서울청 소속 체취권이 이양의 시신을 찾아내는 등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태양광사업 편의 제공 댓가 뇌물받은 한전 간부 징역형

태양광발전사업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댓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간부 A씨(55)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4213여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한전 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수한 뇌물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해남 실종 할머니 열흘만에 숨진 채 발견

강력범죄 연관 의혹 제기 속
경찰 모든 가능성 놓고 수사

연이은 폭우에 양파저장 창고에 둘러본다며 홀로 집을 나섰던 80대 할머니가 실종 열흘만에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된 할머니를 찾겠다며 실종 전단지까지 배포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숨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주인이었다.

8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해남군 황산면 소재 해남천 하류에서 80대 노인이 숨겨졌던 것을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노인이 지난달 28일 오전 7시 30분께 해남읍 남송리의 한 창고를 방문한 뒤 행적이 끊긴 최모(여·80)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해남에 51.4mm의 비가 내린 지난달 27일 남송리 창고에서 마을 주민들과 양파작업을 한 뒤 다음 날에도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자 창고의 양파 상태를 보기 위해 혼자 택시를 타고 집을 나섰다

경찰은 당시 최씨의 마지막 행적이 찍힌 CC-TV 위치와 해남천 상류간 거리가 500여m에 불과한데다, 이틀간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에서 해남천에 실족 또는 사건 발생 후 유기 여부 등이 예상됐음에도 30

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하천 주변을 수색하는 데 그쳤다.

결국 최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최씨의 마지막 행적이 찍힌 장소와 13km 떨어진 해남천 하류에서 주민에 의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실종 당시 최씨가 일정 규모의 현금이 오고가는 양파 등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범죄와 연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경찰이 초동 수사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사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기아차 취업 미끼’ 19억 챙긴 전 노조간부 검거 채용된 10명, 고위직 연루 가능성 조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19억원을 가로챈 전 노동조합 간부 황모(48)씨(광주일보 5월 31일자 6면)가 7개월여 도피생활 끝에 시민 제보로 붙잡혔다.

경찰은 황씨에게 청탁한 자 중 상당수가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실 등에 주목하고, 기아차 광주공장 인사업무 관련자와 고위직 등을 대상으로 취업사기와 관련한 돈이 실제 전달됐는 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48)씨를 지난 5일 오후 6시 10분께 여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노조간부 신분을 이용해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000만~1억5000만원씩 총 19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 6일 무단결근을 하고 잠적했으며, 서울과 순천, 목포 등지를 돌아다니며 도피 행각을 이어가다가 올해 1월 중순께 여수에 원림을 얻어 은둔하다 수배전단을 본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경찰은 결정적 도움을 준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거쳐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조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황씨에게 금품을 건넨 취업희망자 중 실제 기아차에 채용된 근로자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의 채용과정이 적절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전직 기아차 노조 대의원 소모(41)씨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김모(37)씨 등 공범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폭염속 통학버스 원생 방치 유치원 폐쇄 부당”

광주고법, 원심 판결 취소

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 유치원 원장 A씨가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 요구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원을 폐쇄해 원생들에 대한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유치원 폐쇄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 원생 및 학부모가 전화 등으로 겪는 정서·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치원을 계속 다니는 원생 부모를 비롯한 피해 학생의 부모도 폐원을 원

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유치원 위법 사항은 시정 또는 변경, 운영정지 명령과 같은 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 확정까지 폐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2016년 7월 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당시 4세)군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버스에 방치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통학버스에 A군을 방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이 유치원 버스기사, 주임교사, 인솔교사는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금고 4월형이 확정됐다.

한편 아직도 의식없이 누만 뜨고 있는 A군은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격리병실, 어린이 병동을 전전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호남권역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술 취해 병원응급실 의사 무차별 폭행한 40대 철장형

○술에 취해 손과 발로 병원 응급실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철장형.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9시 30분께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A(37)씨의 열광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B(46)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는 것.

○B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A씨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B씨가 당직 의사인 A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사건”이라며 “A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분할매매 가능)
- 문의. 010-6834-7400

